내일 민주·법치 회복의 날…여야 "기각"·"파면" 여론전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인근서 "탄핵 반대" 철야 시위
민주당 "尹 파면은 국가 존망의 문제…내란 청산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탄핵 기각·각하'와 '파면 촉구'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헌재에 "역사의 수호자'로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헌재에서는 조배숙, 성일종, 임종득, 이인선 의원 등이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헌재 주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안국역 등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선고 당일까지 철야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낼 것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이고,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내란을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면 불의의 과거사는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이정표를 헌정사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같은 형태의 비상계엄을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파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은 파면을 넘어 윤 대통령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실정과 독선적 국정 운영,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동이 트자마자 응원가를 틀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의 집회 참가자는 안국동사거리 인근에 돗자리를 깔고 은박담요 등을 두른 채 밤을 새웠다.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200여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 안국역 2·3번 출구 일대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 "이제 헌정질서 회복 국가 안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지난 넉 달간 국민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다"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형 산불 사태, 환율 변동, 내수 침체, 미국발 통상 압박 등을 거론하며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매우 절실한 때로,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정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의 결과 승복을 당부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 마주 보던 두 기관차가 충돌한 것 같은 파국을 맞았는데,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내고도 반성 없이 누구 책임이냐를 갖고 싸우는 데 대해 국민은 더 절망스럽다"며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정당)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정치 문제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현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 분권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않은 한덕수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결정 받아들여야"

평화로운 집회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승복을 이야기하는 한 대행의 발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계 기관 대응 체계를 재차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